

데스크시각



김동영

한·미 FTA(자유무역 협정) 본협상이 본격화되면서 국론이 양분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FTA를 글로벌 경제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주장을 펴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농업을 비롯 전 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미국 원정시위까지 벌이고 있는 현실에서 보듯 우리 사회의 갈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협상 상대는 지구상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이다. 정부는 '최대한' 요구하고 양보는 '최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는 만큼 간단치 않다. 칠레나 싱가포르와는 비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지루한 '풀다리기'가 될 것이다.

농업부문 심각한 타격

정부는 한·미 FTA가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중국 등 후발국가의 매서운 추격 등을 감안할 때 '선택과

목'이 아닌 '필수과목'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한·미 FTA를 '경제 고속도로'

에 비유하고 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전용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의

국론 분열 조장하는 한·미 FTA

속도를 내고 있지만 복잡한 국도에서 법정속도인 60km도 못내고 있는 우리 경제에 한·미 FTA는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전용고속도로가 될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개방은 경쟁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는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온 미국의 교육, 의료, 에너지, 금융, 쌀, 축산류, 과실류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어야 한다. 경쟁에서 살아남은 부문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국가경제를 선도해 나갈 것이 틀림없다.

우리의 입장에서 이러한 품목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교육, 의료, 금융, 쌀, 과실류 등 상당수 분야는 질 좋은 미국 상품에 밀려 경쟁력을 잃게 되고 기업과 노동자들은 퇴출과 도산, 실직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

무엇보다 이 지방의 주산업인 농업부문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한국의 농산물시장을 전면 개방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농업부문을 별도 항목으로 다룰 것과 농업부문을 조금 철폐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하다. 현재 20:80의 사회가 자칫 10:90의 극단적 사회로 치달을 수 있다.

정도의 실직자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는 이제라도 협상 자세를 기다려야 한다.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이라는 단순 논리를 접근해 안된다. 설사 '득'이 많더라도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현재 20:80의 사회가 자칫 10:90의 극단적 사회로 치달을 수 있다.

'준비된 협상 비정상'

정부는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의 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준비도 덜 된 한·미 FTA 협상은 비정상적인 행위"라며 "미국의 강력한 FTA 요구에 맞서 우리 정부도 강력한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아하게 협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충고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은 이미 심각하다. 한·미 FTA가 정부의 주장처럼 '실'보다는 '득'이 많더라도 노동자, 농민 등 시장개방에 따른 예상 피해 집단들을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일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런 대책마저 없다면 '우아한 후퇴'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농민등 국민 90%의 회생 아래 10%의 배를 불릴 수는 없다.

〈편집국 부국장〉 dykim@kwangju.co.kr

고 있다.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농업생산액은 쌀을 포함해 8조9000억원 감소하고 우리 농업의 40%가 고사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특히 수산분야는 제조업이나 농업부문에 비해 정확한 피해분석이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과격히 헛선을 수 있다.

또 김첨후 전 농림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촌 인구 350만명 중 절반은 농촌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촌에서 7만~14만명

시설

DJ열차방북 성사는 北韓에도 이롭다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지난 6월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경공업 합의서)와 한강하구 물재체취사업 추진 등 9개항의 합의문을 체택했다. 남북관계가 경색될 위기국면에서 남북열차시범운행을 조건으로 구체적 경협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번 남북 경공업 합의서 체택으로 오는 27일로 예정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시 열차 이용이 가능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물리적 시한을 감안해 볼때 현재로서는 열차 방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우리 측이 열차시범운행과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연기시키는 데는 일단 성공했으나 북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시험운행시기를 확약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날짜까지 합의하고도 지난날 열차 시범운행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던 북한 인민당 앞으로 많은 난관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 남측의 원자재 제공개시 시기에는 열릴 예정인 김 전 대통령 방북을 위한 제 3차 실무접촉에서 열차 방북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 DJ열차방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측의 성실한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독선·아집 벗자는 담화 蘆대통령부터 실천을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현충일 추념사에서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노 대통령은 "독선과 아집, 배제와 탄도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역사발전의 장애물"이라며 "우리 정치도 적과 동지의 문화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 경쟁의 문화로 바꾸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기업들이 상품의 질과 서비스로 경쟁하듯이 정치도 정책과 서비스로 경쟁하는 시대로 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는 노 대통령의 이날 메세지가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호국 영령들의 고결한 희생을 추모하면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국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당부하고자 하는 진심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또 한편 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주문하기 전, 대통령 자신과 집권 앤솔리트들로부터 독선과 아집을 버리는 모습을 먼저 보였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갖는다.

대통령의 담화는 5·31 지방선거의 여

당 참패와 노대통령 책임론·실정 심판론이 아직 부글부글 끓고 있는 와중에 나왔다. 특히나 여당의 참패는 노대통령과 참모들의 오만과 독선, 아집, 타협을 좌악시 하는 암마주어리즘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여당 내부에서도 거침없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되래 독선과 아집 탈피를 언급하는 건 자기반성과 다짐인지 국민과 애당에 대한 호소인지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100년 전 망국과 식민 역사를 상기하며 "이땅의 권력자들이 편을 갈라 끊임없이 싸우다가 당한 일이며,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나라를 일으켜야 할 때 오히려 백성을 억압하여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게 한 결과"라고 말하기도 했다. 참으로 옳은 인식이다. 대통령의 추념사가 자기 다짐인지 호소인지는 차치하고 이제부터라도 꾼 가르기 보다는 통합으로 나라를 이끌어주기 바란다.

無等鼓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사이버 베이비' 붐이 일고 있어 관심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남녀 사진을 합성, 2세의 모습을 미리 보는 이들은 고등학생부터

기혼 30대까지 월 6천여명에 이른다.

'출신을 세계 최자'인 한국이 가상세계에서는 '2세 만들기'가 한창이라니 아

이려니가 아닐 수 없다.

'2세 합성' 프로그램은 남녀 사진 2장

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2세를 볼 수 있다. 처음엔 일부 네티즌들의

장난 수준이었지만 '2

세 예측'이 인기를 끌자

제작자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업체도

생겨났다.

지난해 10월부터

'디지털 2세 만들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는 P사는 2장의 사진만 제출하면 범인

몽타주를 만드는데 사용됐던 '모르핀(morphing)' 기법을 활용해 2세를 만들

어준다. 하루 이용객이 200~3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사이버 베이비 붐.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의 정신호로 작용하길 바란다.

먼 무리일까.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기고



안명원

민선 4기 지방 동시선거가 막을 내렸다.

부분적으로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문제가 된 점도 나타났다. 당선 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자차 살림에 지장을 주고 재선거를 하는 문제 등은 어떻게든 당선이 되고 보자는 것이고 논공행상으로 인사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 선출방식에 따른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제도 개선으로 투명해 지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선거는 정책을 무기로 겨뤘으므로

설 이라는 미명으로 나주로 내줬으나 만큼 10km 거리인 핵심도시와 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 '근무는 나주서, 생활은 광주에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둘러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민선3기 생산도시로의 기반을 더욱 완벽히 다질 일이라고 보는 것이다. 수출 흐르자인 자동차와 디지털전자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그 밖의 R&D, 디자인, 광산업, 금형, 콜 센터 등 서비스산업에 이르기까지 고용을 늘리는 분야라면 과감히 추진할

민선 4기 시장에 거는 기대

로 앞서 3번의 선거보단 부정당선 후유증이 덜 하리라 보지만 이번에도 여느 때보다 바짝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그것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주민소환제 때문이다. 우리 시민은 이 제도를 크게 활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민선 4기는 우리 광주로서는 참으로 중요한 4년이란 게 뜻있는 시민은 이미 알고 있는 바다.

첫째, 문화중심도시를 국책사업으로 조성하는 20년 사업기간 중 주춧돌을 놓는 가장 중요한 시기란 점이다. 계획만 놓고 보면 핵심시설인 아시아문화전당은 2010년 5월이 완공이다. 물론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다음 국회에서 통과되며 관건인 예산 지원은 안정적으로 이뤄지겠으나 정권이 바뀌면 변수 또한 있다 하더라도 핵심기간이 아닐 수 없다.

둘째, 나주핵심도시 건설로 광주가 실속 있는 시너지효과를 쟁기는 일이다. 한전을 광주·전남 핵심도시 공동건

일이다.

넷째, 복지와 문화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이번 선거가 여느 선거와 다른 점은 정책선거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임기 중 공약을 실천 할려는 당선자는 부답으로 짓눌릴 것이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임기가 끝난 후 공약을 100% 이뤄졌는가'라는 것을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다.

4년이란 기간이 결코 길지만은 않다 고 볼 때 여건이 가능한 공약부터 착수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장 당선자가 내년 9개 공약 달성을 물론 특히 일자리 13만 4천개를 만들고 계속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해 잘사는 일등광주를 기여 코 만드는 경제시장이 되라는 뜻이 담겨 있다.

공약실천평가위원회 같은 기구를 뒷 책걸을 받는 방법도 의지의 실현이 아닐까

〈학문당 대표〉

국제 결혼 급증... 제도적·행정적 지원 마련돼야

국제 결혼이 급증하면서 주변에서 국제결혼 부부들을 쉽게 접하지만 여전히 이들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

이주 여성들의 정착을 돋우기 위한 공공 서비스는 미흡한 수준이어서 취업은 고사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주 여성들이 많다.

특히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2세 흔혈아 대부분이 육아 과정에서 한국어 서툰 모친 영향으로 언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학교에서도 또래들에게 '튀기'라는 놀림을 당하기 일쑤다.

시민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면서 정책을 흥보한다는 점에서 이번 공연은 흥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들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부실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될 우려도 높다.

이미 우리 나라에서 국제 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어서고, 2세까지 포함하면 오는 2010년에는 1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순혈주의에 얹메이는 시대는 지났다. 이주 여성들이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이들 가족들이 일상 생활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이형준·광주시 서구 금호동

건강 사랑 콘서트, 즐길거리 제공하며 정책홍보 효과만점

최근 가족들과 산책을 나갔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센터 애완견 보호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리는 행사이다보

▲정진·광주시 동구 소대동

光州日報

회장 許宰皓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鎬 편집국장 池炯源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기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511>

판 고 국 2